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8064

 서울시에너지추진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발간사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기증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발간사

민법이 제정된 이후 호주제도는 남녀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며, 부모를 차별하는 제도로서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헌법 제36조)에 반하며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족형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21세기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호주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여 현실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가족제도입니다. 또한 호주승계순위는 철저하게 남성 우선으로 되어 있어, 성차별적인 관념을 재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선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혼인을 하면 호주인 남편 또는 시아버지의 호적에,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 호적에 등재하도록 하는 호주제도는 남녀평등에 위반되며, 어머니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재혼가정의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호주제도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라고 오해하여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미풍양속에 반하고 가족해체를 촉진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호주제도는 일본이 효과적인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가족상속제”를 우리나라에 이식한 것으로서 우리의 전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제도는 미풍양속이나 전통이 아니라 일제 식민잔재로서 반드시 고쳐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호주제도에서 말하는 “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현실의 가족공동체”가 아니라, 호적의 편제단위로서 매우 형식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호적의 편제단위로서의 “가”가 없어진다고 하여 현실의 가족공동체가 붕괴된다고 하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불건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상징하는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에 입각한 가족제도,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단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개인과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작업입니다.

그 동안 여성계를 중심으로 40년이 넘도록 호주제도 폐지운동을 계속하여 오던 중 2000. 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부지원 등에서 호주제도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입법운동과 함께 그 대안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3. 5. 27. 이미경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총 의원 52명의 발의로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법무부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에서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여 온 과정을 담아 백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호주제폐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여성·복지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백서가 호주제 폐지와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3. 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병 모

서 문

공동의 삶은 저마다의 규칙을 전제로 하기 마련이다.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동체인 가족 역시 그러하다. 그 안에서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 더 큰 공동체인 사회를 지속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가치들을 배워야만 한다. 가족생활의 어디까지 사회적 약속인 법이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가족의 특성과 사회적 필요성의 조화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질문인 듯하다.

해방이후 최초의 민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호주제를 둘러싼 격렬하고도 끈질긴 논란을 지켜보며 우리는 처음부터 평등이 아닌 차별에 너무 친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깊은 회의마저 갖게 된다.

동성동본불혼금지의 위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입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성계는 호주제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2000년의 주요사업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호주제에 관한 위헌소송을 준비해보자는 이석태변호사의 제안으로 이를 준비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호주제폐지를 주장하는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여 운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연대모임 회의를 통하여 많은 피해사례 유형 중 2가지의 유형을 선정한 후 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모집하였다. 남편과 부인이 함께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을 무호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과, 이혼한 엄마가 아이의 호적을 엄마의 호적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그 각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함께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법원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

최근 호주제폐지운동은 일정한 탄력을 받고 있는 듯 하다. 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여성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호주제 폐지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으니 초기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드디어 2003. 5. 27. 52명의 의원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담은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한편, 여성부에서 주관하여 몇 개의 주무부처와 여러 시민단체들을 아우른 호주제폐지를 위한 특별기획단이 꾸려져 가동 중에 있고 법무부에서는 민법개정소위가 구성되어 별도의 민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발간사

iii

서문

v

1부 호주제폐지 운동일지

1. 호주제폐지운동 연혁

11

2.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진행 경과

15

2부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1. 호주제폐지를 위한 법적접근

21

2. 호주제폐지론

47

3. 소송기록

102

호주변경신고서(무호주변경)

103

입적신고서(모가입적)

104

호주변경신고불수리처분서

105

입적신고 불수리처분서

107

호주변경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무호주변경신청)

108

입적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110

서울가정법원 호적사무관장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문(무호주변경신고)

112

서울가정법원 호적사무관장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문(모가 입적신고)

1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입적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기각결정문

114

항고장

115

위헌여부심판제청서

119

781조 1항 위헌제청결정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호파1095)

122

781조 1항 위헌제청결정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호파1886)

128

778조 위헌제청결정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호파1887)

132

778조 1항 위헌제청결정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호파261)

136

4. 헌법재판기록	141
가. 신청인 의견서	142
나. 법무부 의견서	146
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154
라. 이해관계인 의견서	159
가정법률상담소	159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162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166
호주제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71
성균관가족법대책위원장	177
5. 기타	180
법률구조결정서	181
법률구조 소송수행변호사 위촉통지	182

3부 호주제 폐지 이후

1. 호주제폐지와 민법 개정안	185
2. 개인별 신분등록부와 가족부의 비교	201
3.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213
4.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220
5.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233
6. 개인별신분등록제도	261
7.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267
8. 각국 신분등록부	279

4부 개정법률안

1. 民法中改正法律案 299

1부 호주제폐지 운동일지

■ 호주제폐지 운동연혁

■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진행 경과

1부 호주제폐지 운동일지

■ 호주제폐지 운동연혁

■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진행 경과